

# 마주협 위기... 입지 좁아지는 불교 NGO

불교계 대표 이주진 지원 협의체인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진오, 이하 마주협)가 운영난에 처한 가운데 불교계 NGO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마주협은 4월 7일 2015년 정기총회를 열고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 데 이어 10일 조계종 총무원 측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올해 마주협은 조계종이 그동안 지원해 온 사무국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며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2006년 불교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마주협은 15개 지원단체가 소속되었다. 마주협은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업비 4000만원과 사무국 운영비 3000만원 등 총 7000여 만원을 지원받아왔다.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며 불교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활동이 중요시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며 운영비 부분이 삭감됐다. 현재 마주협은 상근직원 2명 중 1명이 사표를 낸 상황이며 지난해 11월 부임한 김영선 사무국장이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 중단 내 이주민위원회 형식으로 마주협 업무를 이관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 또한 종현이나 종법에 위원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무산됐다"며 "지역의 회원 단체들은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사무국 운영을 지원할 상황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조계종 지원 예산 삭감에 운영난

### 1명이 업무 맡아... 타개책 고민

### 불교 시민사회단체 재정 어려움

### 재가연대 단기부채 4천만원 달해

### 환경연대 사찰 내 활동에 집중

### 전문가 "불자 사회인식 변화해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마주협 운영위 회의를 계획 내내 적금 검토하겠다"며 "사업비 지원 예산 중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회원들의 회비로 충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협의 위기에서 전문가들은 불교 NGO의 자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마주협 뿐만 아니라 NGO들은 사실상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적으로 NGO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회비를 내는 회원이 감소하는 등 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4월 4일 7기 집행부가 발족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경우 한때 1600여명의 회원이 270여 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운영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단기부채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영난으로 사무실 일부를 매각했으며 신입 집행부는 취임에서 부채해결을 위해 대 표단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한 NGO단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불교 몇 년전만해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NGO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김두현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환경문제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지금은 숲체함을 비롯해 사찰 내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회원이 감소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운영계획을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지난해 열린 참여불교재가연대 15주년 심포지엄에서 "사회적으로도 NGO의 위기가 지적되고 있다. 불교계 NGO활동이 위축되면 그동안 불교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받아 온 사회적 역할 수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적극 모색해야 할 조계종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지원만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단 내 환경위와 노동위 등의 조직과 기존의 유관단체들과의 장기적인 비전과 운영계획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NGO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은 복지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관심이 부족하다. 사실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행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당 NGO가 활성화 된다"며 "불교가 세속을 떠나있다는 불자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 등을 통해 불자 전반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 중단해야"

## 조계종 노동위 등 3대 종교 한목소리... 노동인식 개선 지적

"정부가 취업난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용 유연성은 비정규직 양산에 의한 노동구조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다."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인들이 한데 모여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노동위·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장그레살리기운동본부는 4월 7일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고통을 막는 종교계역할' 발제를 맡은 정수용 신부는 "국가는 강한 고용안정 고용주 불평등한 노동구조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비정규직 문제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종교가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이어 "노동의 가치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이루기

위해 종교계가 앞장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종교계 내부의 노동인식부터 바꿀 것을 주문했다. 양 집행위원장은 "종교에는 전통적으로 봉사 개념이 있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불교만 해도 총무원 외 개별사찰에는 사회에서의 비정규직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양 집행위원장은 "조계종의 경우 노동위 활동을 통해 노동에 대한 개념을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찰과 교회 안의 비정규직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공동행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노동위원 도철 스님은 "노동문제에 대해 3대 종교 중 불교계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이번 활동이 아직 낯설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3대 종교단체는 4월 7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비판했다.

## '갈등' 동국대 총동창회 통합 합의

### 4월 9일 양측 소송 취하 원로교수들 前 총장 비판

2014년 3월 양분된 동국대 총동창회가 1년 만에 하나로 합쳐졌다. 원용선 동국대 총동창회 회장과 박종윤 회장은 4월 9일 서울 백상빌딩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통합을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라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며 총동창회 회칙 및 선거 규칙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종윤 회장이 분열시 반출한 통장 및 직인 등을 원용선 회장 측에 인계하기로 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이번 합의에는 대승적으로 통합에 나서 준 박종윤 회장을 예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더 이상 갈등으로 동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용선·박종윤 회장 양측으로 갈라진 동국대 총동창회는 4월 9일 통합에 합의했다.

한편, 동국대 신재호·양영진·오원배 교수는 4월 7일 김희옥 前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책임기간 동국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동문기업인 KCC와 규정을 어겨가며 수백억원대 수익계약을 한 것, 예일대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7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점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 "비구니 분열행위 당장 중지하라"

### 비구니회 9일 입장문 발표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3월 16일 열린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해 "비구니 승가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뒤늦게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9일 '제방의 비구니 스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비구니 승가의 불신과 반목을 부추기지 말 것 △종법과 회칙과 관례를 무시하는 선전·선동 행위 엄정 대처 등의 방침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회장 스님의 불신임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회칙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이는 비구니 승가를 부정하는 자기당차일 뿐"이라며 "선배 비구니 스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전국비구니회를 흔드는 어떠한 내외부의 행위를 일체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16일 결의대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 행위"라면서 "위법 행동은 사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 행위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韓 불교, 미얀마 오지에 전력 발전소 건립

## 하얀코끼리, 나가 지구 방문 발전소 등 협력 사업 협의

### 발전소 기술 자문 진행 이상적 공공협력 '새 장'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펼쳐온 불교계 국제 구호NGO 하얀코끼리(이사장 영담)이 미얀마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 스님은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박 7일간 미얀마 산간 오지인 나가족 자치관리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인도-미얀마 접경지역 사가인 주에 위치한 나가족 자치관리지역은 나가 민족이 살고 있는 산간 오지로 도로와 전기 등 사회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하며 오랜 동안 내전으로 인해 원주민의 삶은 파폐화돼 있다. 영담 스님의 이번 나가 지역 방문은 미얀마의 왕사이자 시타구재단의 이사장인 아니파라 큰스님과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또한 나가 지역에 한국 국제개발협력NGO가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 스님은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박 7일간 미얀마 산간 오지인 나가족 자치관리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은 영담 스님과 현장을 동행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특히 중소형 발전소 건립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영담 스님은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과 원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는데 선차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중소형 발전소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영담 스님은 4월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형 발전기와 기반시설, 인프라 확보 등 발전소 1기당 약 5억 원 안팎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 시범적으로 1기를 설치하고 추가 건립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

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과 학교 건립 문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에는 발전소와 기반 시설 전문가들이 함께 동행해 설비를 살폈다"면서 "이는 미얀마 정부의 철저한 협조 속에 이뤄졌다. 민간개발협력의 차원을 넘어 양국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공외교로서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얀코끼리는 국내 독지가들의 지원을 통해 모은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기증하는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 광복70주년

#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 기원대회

##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불기 2559

## 2015.5.16 토요일

**5.15 금**

18:00 ~ 20:00 **현충 만찬** | 그랜드 힐튼 컨벤션 홀

**5.16 토**

14:00 ~ 16:00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회의** | 그랜드 힐튼 다이아몬드 홀

20:00 ~ 21:00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 광화문 광장

**5.17 일**

10:00 ~ 11:30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복무차대회** | 조계사

18:00 ~ 20:00 **현충 만찬** | 그랜드 힐튼 그랜드 플라자

주최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주관기관 **세계평화 기원대회 동행위원회** **연동회보존위원회**

공식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총무원회**